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와 그 해결방안

이 성 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 약 문

법무부는 2011년 1월 11일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이하 “특례법안”이라 한다)은 북한 주민의 인적사항과 상속·증여 등으로 물려받은 남한 내 재산내역 등을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국내 재산권 행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산 행사 등을 철저히 규제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고려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상속문제에 관한 규율에 있어 남북 상속법의 법적 효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례법안 제4조(재판관할권)와 제6조(북한판결의 효력)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남한 소재 상속재산은 남한상속법에 따라, 북한 소재 상속재산은 북한상속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상속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및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간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私的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상속권,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재판관할권, 상거소지법, 제척기간

【 目 次 】

<p>I. 서 설</p> <p>II. 북한의 법적 지위</p> <p>III. 북한의 상속법과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상속 문제</p> <p>1. 북한의 상속법 개관</p> <p>2.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상속 문제</p>	<p>IV.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사법의 적용과 그 제한 가능성</p> <p>V. 분단국가의 입법례</p> <p>1. 독 일</p> <p>2. 중 국</p> <p>3. 비 교</p> <p>VI. 결 론</p>
--	---

I. 서 설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남과 북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중 일부는 통일 후 재결함으로 말미암아 중혼문제나 상속문제와 같이 심각한 가족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은 상속에 관해서 1990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의 제5장 ‘상속’편의 규정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규율하여 왔으나, 기존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¹⁾에서 2002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위원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을 새로 제정²⁾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1년 1월 11일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적사항과 상속·증여 등으로 물려받은 남한 내 재산 내역 등을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중 상속에 관한 부분을 보면 북한 주민의 국내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안 제4장) 재산권 행사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며(안 제18,19,20조), 북한 주민의 인적사항과

1) 김영규,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법학논총 제20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23면.

2)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 홈페이지 사이버강의실(학부) 수록(<http://home.kookmon.ac.kr/~law/board/zboard.dhp?id=pjwhuest>), 73~74면.

재산내역을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고 북한 주민에게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안 제 22조 제1,2,3항),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하도록(안 부칙 제5조)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사법관계를 우리 법체계로 규제한 예로는 이 법안(이하 “특례법안”이라 한다)이 처음이다. 특례법안에 따라 북한 주민이 재산 상속을 받을 경우, 남북간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 주민과 그 외의 북한 주민 사이에서 엄청난 위화감이 생겨날 것이고,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남한 상속인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는 점도 고민거리이고 근본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상속권이라는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지에 관한 조사부터 필요하다.

이 논문은 남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북한 주민인 상속인의 권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관해서 특례법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 쓰는 순서는 먼저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의 상속법 체제를 살펴 본 다음,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 사법의 적용 한계 및 관련 사례를 검토해 보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한다.

II.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민사법의 적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주민의 남한에서의 법적 지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남한에서의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정설은 통일조항의 우위성을 내세워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부인하고자 한다(통일조항우위론). 이 설은 국제사회에서나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실체로 활동하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토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는 ① 영토조항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규정이므로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견해³⁾ ② 헌법변천을 통하여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견해⁴⁾ ③ 영토조항의 규범력은 인정되지만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에 비하여 그 규범력이 약화, 완화되어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⁵⁾ ④ 영토조항이 규범력은 가지고 있으나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관

3) 윤명선, 김병욱, 헌법체계론, 법지사, 1998, 156면.

4) 김승대,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 462호, 1995, 44면 이하.

5) 최대권, “통일의 법적 문제”, 법문사, 1990. 29면 이하.

계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전자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는 견해, ⑤ 영토조항은 일반규범이고 평화통일조항은 특별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후자가 전자에 우선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체제유지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보던 입장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도 갖는다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의 법리적 기초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도출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어떠한 학설에 따르든 이원성의 근원이 되는 특수한 관계는 사법관계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남한과 북한이 현재 - 휴전상태에 있기는 하나 - 공식적인 전쟁상태에 있지 않고, 국교관계가 수립되지도 않았으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독특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원의 태도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동 법안은 정상적인 국교관계에 있는 나라의 상속인과 우리나라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법률효과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Ⅲ. 북한의 상속법과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상속 문제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북한의 상속법에 관해 살펴본 다음 북한 주민과 관련한 상속문제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정작 북한에 상속권이라는 사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례법안의 존재 또한 무의미해진다.

6) 대판 1993.10.8. 93도1951; 대판 2008.4.17. 2003도758 (전원합의체 대판 2009. 5.14. 2009도329; 헌재 1993.7.29. 99헌바 48; 헌재 1997.1.16. 92헌바 6.26. 93헌바 94 . 95(병합)등 참조.

1. 북한의 상속법 개관

가. 상속일반

① 상속회복청구권

종래 북한 가족법은 ‘상속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 분쟁을 재판소가 해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상속인은 단기시효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시작한 때부터 10년 안에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를 재판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4조), 이는 행사기간에 관하여 차이가 있지만, 중국 상속법의 상속회복청구권과 더불어 사회주의 가족법이 변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② 상속의 대상

상속의 대상에 대하여 북한 상속법은 “1. 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도서 화폐·저금·가정용품·문화용품·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운전 기재, 5.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6. 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명문화함으로써 북한 민법의 개인소유권의 대상보다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구체화하여 개별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를 열거하고 있다⁸⁾.

③ 상속세

북한은 상속세에 관하여 자본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세금의 한 종류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호해야 할 요구로부터 낮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착취계급이 근로자들을 계속 착취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7) 신영호, “북한 상속법의 내용과 문제점”, 사법학의 재조명, 송촌 박영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4, 730면.

8) 김영규, 앞의 논문 주1), 32면.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와는 달리 대외경제관계에서 외국인이 취득하는 재산권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동산·부동산·화폐재산·유가증권·예금(저금)·보험금·공업소유권·저작권·토지이용권·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속의 대상에는 개별재산 이외에도 위와 같은 내용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⁹⁾.

나. 상속인

① 태아의 상속능력에 관한 개별적 보호주의의 명문규정 신설

북한 상속법 제17조 제1항은 제1순위의 상속권자로서 ‘출생할 자녀’인 태아를 포함 시킴으로, 태아의 상속능력에 관한 개별적 보호주의의 명문규정을 신설하고 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북한 상속법은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시 출생할 자인 태아의 몫을 남겨놓아야 하고, 태아의 상속분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에는 출생한 자의 몫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해제조건설의 입장을 취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② 법정상속인 범위의 구체화

북한 상속법은 제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부모’, 제2순위인 ‘손자녀와 조부모·형제자매’의 범위를 양친자와 계친자를 인정하는 북한 가족법의 태도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순위의 상속인을 ‘가까운 친척’에 갈음하여 ‘4촌 안의 혈족’으로 촌수를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제17조)¹¹⁾.

③ 상속결격자의 범위 확대

북한 상속법 제9조는 종래 북한 가족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던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에 포함시키고 있다¹²⁾.

9) 김영규, 위의 논문, 33면.

10) 태아가 상속권자로서의 자녀에 포함되는 상속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북한 가족법은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과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른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론 상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태아도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에서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 김영규, 위의 논문, 34면.

12) 김영규, 위의 논문, 35면.

다. 상속의 효과

① 한정승인의 원칙을 단순승인으로 전환

북한 상속법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때로부터 6월 안으로 재판기관에 서면이나 말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6월 안에 승인 또는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하게 승인한 것으로 인정됨이 원칙이다(제20조)¹³⁾.

②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의 신설

북한 상속법은 재판기관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를 신설하였다(제56조)¹⁴⁾.

라. 유언과 유언상속

① 유언 방식의 구체화

북한 상속법은 기존에 해석상 인정되고 있던 서면유언과 구두유언 이외에 녹음에 의한 유언과 공증유언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37조)¹⁵⁾.

② 유언상속의 제한과 유류분의 범위

북한 상속법은 유언자가 법정상속인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을 부양받던 배우자·자녀·부모에게는 2분의 1 이상,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 이상 남겨놓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어 구체적으로 유류분의 크기를 정하고 있다¹⁶⁾.

2.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상속 문제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는 북한의 상속인이 남한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하는 경우와 남한의 상속인이 북한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통일로 인한 재결합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재결합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남한에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3) 김영규, 위의 논문, 36면.

14) 김영규, 위의 논문, 37면.

15) 김영규, 위의 논문, 37면.

16) 김영규, 위의 논문, 39면.

가. 남한에 피상속인, 북한에 상속인이 있고 재결합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첫째로, 남한에 거주하는 피상속인과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 간의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는 북한 거주 상속인들이 호적상 잔류자로 기재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년 3월 민법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적상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호적법이 개정될 경우, 신분 등록 편제가 현재의 ‘가(家)’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변경¹⁷⁾되기 때문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과의 친족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된 호적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면서 이산가족의 상속관계 규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주장될 수 있으나 이보다는 남북한 간에 민사사법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 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남한 거주 피상속인과 북한 거주 상속인간의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북한 거주 상속인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관계가 처리되어야 하며(민법 제1053조), 이러한 절차 없이 남한 거주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은 무효이다.¹⁸⁾ 이러한 취지에 맞춰 특별법안 제12조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별에서 북한 주민 또는 대리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북한 거주 상속인이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남한 거주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북한 거주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즉, 남한 거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 쌍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북한 거주 상속인이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남한 거주 상속인이 북한 거주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남한 거주)상속인이

17) 박민표, [신분등록법] 양성평등 실현 ‘가(家)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국정브리핑 뉴스, 2006년 11월 2일자.

18) 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사회과학논총 제7집,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43면.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이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¹⁹⁾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안 제11조 제1항, 제3항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11조 제1항, 제3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 제11조 4항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법안 제정일 전까지는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일 또는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이전까지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의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하는 특별 규정을 제정하였다.

나. 남한에 피상속인, 북한에 상속인이 있고 재결합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결합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북한 거주 상속인과 남한 거주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북한의 상속인들은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 거주 상속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로 인하여 남한의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의 취소절차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를 회복하면 그 이후에는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북한의 상속인이 남한의 상속인과 완전하게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법안 제12조 제2항은“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고 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상속제도라는 것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상속재산의 형성 및 증가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평가하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 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 (중혼, 상속문제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청,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집(1)」, 2002, 93-94면.

다. 북한에 피상속인, 남한에 상속인이 있고 재결합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북한의 피상속인과 남한의 상속인간의 가족관계가 유지되어 왔거나 또는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고 재결합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북한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남한의 상속인은 북한 상속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북한 상속법 제13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으로 “1. 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도서·화폐·저금·가정용품·문화용품·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운전 기재, 5.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6. 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²¹⁾ 이들 가운데 실제로 북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저금이나 승용차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상속 분쟁을 초래할 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한에 재산을 남겨두고 월북했거나 납북된 북한 거주 가족(피상속인)에 대한 남한의 가족이 사망신고나 실종선고를 하고 이미 상속을 개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우리 상속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북한 거주 가족(피상속인)이 남한 가족에 의해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존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남한 거주 가족들에 의하여 개시된 상속은 무효로 되며, 북한 거주 가족은 남한 거주 가족들 및 그들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북한 거주 가족이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북한 거주 상속인들은 앞서 북한 거주 가족이 상속인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²²⁾

라. 북한에 피상속인, 남한에 상속인이 있고 재결합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 종래 북한의 가족법은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동법 제53조)고만 규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 상속법을 새로 제정 하면서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국민대학교 박정원교수 홈페이지 사이버강의실(학부)수록(<http://home.kookmin.ac.kr/~law/board/board.php?id=pjwuest>), 71~72면 참조.

21) 위의 논문, 71면.

22)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1998, 352면.

재결합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북한 거주 피상속인과 남한 거주 상속인과의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단절되었더라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시 회복하면 남한의 상속인은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에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거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이미 개시된 상속을 무효로 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마. 정 리

피상속인은 북한에 있고 상속인이 남한에 있는 경우 남한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법률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만약 남한에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둔 채 월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새로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 상속법 제13조 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① 재결합 전 사망하거나 ② 재결합 이후 사망한 경우, 남한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북한 상속인 사이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이미 남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므로 북한에서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서 남한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재결합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된다면 남한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들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상에서 보면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란 현재로서는 통일 전, 남한과 북한 양쪽에 상속인을 둔 남한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남북 또는 월북으로) 실종선고 또는 사망 처리된 경우밖에 없다. 특례법안도 남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북한에도 상속인이 거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다.

IV.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사법의 적용과 그 제한 가능성

서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사이의 사적 법률관계에서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의 일반 원리를 적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 국적에 따른 준거법결정은 불가능하고 장소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이 선택될 것이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후단 참조)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헌법 제3조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모든 법령은 북한지역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현행 민법 또한 북한지역에서 그 효력이 미친다. 민법의 속지적 효력에 관한 대부분의 민법학자들의 견해 또한 이와 같은 입장으로, 다만 일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그 적용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며,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을 회복할 경우 특별히 그 지역에 현행 민법이 시행될 것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³⁾ 한편 민법은 제3조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자연인이 민사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남한민법에 근거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데 법적 장애는 없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이 적용될 여지는 원칙적으로 없다. 전적으로 남한의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남북한관계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를 의미하는 이중적 관계라면,²⁴⁾ 남북한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법적용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 및 북한지역에는 북한의 법질서가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만 남한의 법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만 북한법의 적용을 부인하면 된다. 이렇게 볼 때 상속에 있어서 선결문제인 혼인의 효력,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23) 권용무, 민법총칙, 법문사, 1999, 66면.

24) 이주현,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1), 법원행정처, 2002, 54면 ; 임성권, “남북한 사이의 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제4호, 국제사법학회법학, 1999, 180면, 한편 최대권,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 - 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법학 제9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1993.12), 29면은 특수관계를 대외적으로 1민족 2국가, 대내적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파악하며, 장명준, “6·15공동선언” 실천과 통일지향적 공법적 정비과제“, 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방향, 아시아사회과학원, 2001.7, 7면은 특수관계를 대외적으로 1민족 2국가, 대내적으로 1민족(2국가) 2체제 2정부로서, 잠정적, 과도적, 한시적인 것이라고 본다.

요컨대 남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한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면 된다. 부연 설명하자면 남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기보다 적용을 자제한다고 표현함이 적절하다. 아래 사례는 현재, 그러니까 재결합 전에 남한에 피상속인이 있고 북한에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북한 상속인의 권리에 관한 사건이다.

[참 고 사 례]²⁵⁾

북한에서 살던 A는 1933년 북한에서 B(97년 사망)와 결혼해서 2남 4녀를 둔 뒤, 6·25 전쟁 이후 장녀 C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 왔다.

A는 1957년 남한 호적에 북한에 있는 부인 B와 장녀인 C만을 올렸지만, 1959년 10월에 B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남한에서 D와 재혼하였다.

C는 1987년 11월 A가 사망하자 미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교사를 통해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 "가족관계 회복을 법적으로 인정받자"고 북한 가족들에게 제안하여 북한 거주 상속인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A의 부인 D와 그 자녀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이산가족 중에는 피상속인이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신분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북한에 거주한다고 하여 상속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²⁶⁾ 다만 북한 거주 상속인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고 그들에게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북한 거주 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북한 거주 상속인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동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남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북한거주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적

25)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 18507 사건. 2011. 7. 13. 1심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

26) 대판 1982.12.28, 81다452, 453면.

용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미 남한거주 상속인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유력하나,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특례법안 제12조에 따르면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 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²⁷⁾

민법 제999조의 제2항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북한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상호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분단 상황을 감안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북한거주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북한거주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또한 북한거주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 특히 자본재를 제한 없이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특례법안 제20조는, 누구든지 북한주민이 제11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내 재산(처분대금을 포함한다)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의 의한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는 그 목적에 적절한 한도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반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특례법안 제20조 2항)

요컨대 특례법안은 북한의 2중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혼인이나 상속의 효력 등 완전한 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그 준거법적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과 같이 공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²⁸⁾에는 국가의 개입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분단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분단된 국가의 입법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특례법안 내용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27) 위 사례 1심 판결에서 이를 인용하였다(2011. 7. 13 선고)

28)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참조

V. 분단국가의 입법례

1. 독 일

독일의 통일 이전, 서독의 상속 문제에 관한 준거법 원칙을 살펴보면 지역간사법 적용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독 간의 준거법을 정하되, 피상속인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동독 소재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서독 구 민법시행법 제28조, 신 민법시행법 제3조 제3항과 동독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을 이유로 하여, 비록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서독이어도 동독법을 준거법으로 하였다.²⁹⁾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독일민법시행법에서 이산가족의 상속관계를 규율하였는바, 구동독지역의 피상속인이 통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동독의 민법전이 적용되나 통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독일민법이 적용되며, 다만 구동독 민법전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5. 12. 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독일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³⁰⁾

2. 중 국

중국의 ‘대륙지구와 대만지구 인민관계법’초안에 따르면 대만주민은, 대륙주민과 동등한 상속권을 향유하며, 상속인이 대만으로 간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대륙에 있는 재산상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즉 대만 주민도 ‘중국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대륙에서 사망하여 대륙의 상속인이 유산을 분배하면서 상속권이 있는 대만이주자 또는 대만동포의 유산상속분을 유보해 두지 않은 경우, 이는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대만 상속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법에 따라 그들의 상속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29) 이주현, “동·서독 간의 민사분쟁 해결방식”,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33~34면.

30)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통일사법정책자료 95-II, 1995, 111면.

인민법원은 상속사건 심리 중 상속인이 대만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소송참가를 통지하고, 대만 상속인은 대륙에서 보낸 상속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직접 상속에 참가하러 오거나 그의 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³¹⁾

대만의 경우 양안교류의 초기에는 상속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행정 명령방식으로 확립하여, 대륙주민이 대만에 와서 유산을 상속하려면 대만에서 만 4년 이상 거주한 후 거주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만의 적십자사나 기타 해외 유관 기관에 의하여 동 상속인과 사망자 간의 친척관계에 관한 확인문서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은 대만 민법상의 상속규정과 모순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만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행정법규나 명령들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결국 1989년과 1990년에 퇴보회(退輔會)에 잇달아 제기된 소송사건을 계기로 대륙지구 상속인의 상속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던 행정명령이나 법규의 효력이 부인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 당해 지구의 규정에 따르나, 대만지구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동 조례 제60조).

그리고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 주민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먼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제66조 제1항), 위 조례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위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상속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태를 방지하고 대만의 경제질서의 안정과 공동상속인의 권익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대륙지구 주민의 상속재산 총액은 1인당 20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제67조 제1항 제1문, 제3항),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동 제5항). 아울러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만지구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대륙지구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상속재산총액에서 제외된다(동 제4항).³²⁾ 이상에서

31) 이은정,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 분쟁의 해결”,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 법원행정처, 2003, 121-122면 참조.

32) 앞의 「북한의 가족법」, 354-355면 ; 이은정, 위의 논문 128-131면 ; 이와 관련한 판례는, 강신중,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가족법상 재문제 해결사례”,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3), 법원행정처, 2004, 212면 및 215-216면 참조.

알 수 있듯이 조례는 대만의 이익을 위하여 대륙지구 상속인과 대만 상속인을 많이 차별하고 있다.

3. 비 교

독일의 경우 피상속인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 동독소재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서독이라고 하여도 동독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 등 사적자치와 법적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상속인이 대만으로 간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대륙에 있는 재산 상속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만 주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특례법안은 남북한 주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권의 범위와 친생자관계 확인 및 인지청구 소송에 관한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대만의 상속권 포기기간주 제도처럼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마냥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법적으로 볼 때 국교관계도 없고 공식적으로 征戰 상태에 있는 나라, 특히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국가로의 재산반출을 엄격히 간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VI. 결 론

상속문제에 관한 규율에 있어 남북 상속법의 법적 효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남한 소재 상속재산은 남한 상속법에 따라, 북한 소재 상속재산은 북한 소재 상속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상속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소재 상속재산이 상속분쟁을 초래할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산가족의 상속문제에 있어 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은 남한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제도와 관계된 규율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거주 상속인의 상속권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며, 특례법안에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를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

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그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사적인 교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척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분단 후 60년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북한에 상속인을 남겨 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의문이다. 이렇게 볼 때 특례법안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산 반출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이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등 송금을 허가하더라도 신성한 사회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사상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을 때 당사자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반출이 안 된다는 규정만 두고, 북한 상속인의 재산을 남북적십자사나 공공기관에서 법정신탁 형식으로 관리하게 함이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비 반출 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법은 침묵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맡겨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논문접수 : 2011. 7. 30. / 심사개시 : 2011. 8. 1. / 게재확정 : 2011. 8. 12.)

[參 考 文 獻]

- 강신중,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가족법상 제문제 해결사례”,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 권재열외,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 2004.
- 김영규,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법학논총 제20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 김주수, “이산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족법상의 문제”, 판례월보 360호(2000. 9.)
- 김찬규,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과제 : 이산가족의 상봉”, 『통일』 통권 제128호, 1992.
- 민족통일연구원, 이산가족문제해결 및 자유왕래·접촉 실현방안, 1992.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민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66집, 1992.
-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 1995.
-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통일사법정책자료 95-II, 1995.
-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1998.
-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 연구(II), 법학자료 제161집, 1992.
- 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사회과학논총 제7집,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 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중혼·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점(1), 2002.
- 신영호, “북한 상속법의 내용과 문제점”, 사법학의 재조명, 송춘 박영우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994.
-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 홈페이지 사이버 강의실(학부)수록(<http://home.kookmin.ac.kr/~law/board/zboard.php?id=pjwguest>).
- 이은정,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 분쟁의 해결”,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 법원행정처, 2003.
- 이주현, “동·서독 간의 민사분쟁 해결방식”,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일원 91연구논문, 1991.

최달곤,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 『북한법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북한연구소, 2000.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11.

〈Abstract〉

The Inheritance Problem Caused by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Its Solution

Ministry of Justice gave notice of the legislation of "the exemption law on the family relationship and inherit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on January 11, 2011. The law includes the content that the government will integrate and manage North Korean residents' personal data and their detailed property given by inheritance, gift, and etc. in South Korea. And the key content of the law is to completely regulate the exercise of properties by the residents from North Korea while recognizing some parts of their property rights in South Korea. They are the political measures to prevent properties in South Korea from being turned over to North Korea without constraints in the reality of divided Korea,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inheritance of those from North Korea.

Like this, it is a crucial matter with a direct influence on the heirs' interests of separated families to establish the range of legal force of the law of succession in North and South Korea in terms of the regulation of inheritance. With regard to this issue, the desirable measure for smooth inheritance procedures will be to regulate them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inherited property, that is, to regulate the inherited property locat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property law in South Korea, and that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at in North Korea, as mentioned in Article 4(Jurisdiction) and Article 6(Effects of Judgments by North Korea) of the exemption law. Not only the inheritance problem, but all different ones expected after unification can be solved not just by simple legal regulation but by values beyond laws, such as our will for the unification and performance of moral duty.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tween North and South residents caused by such things as reasonably resolve several issues, while helpful to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be unified and, ultimately, is to contribute to.

Key words

inheritance right, inherited property, claim of inheritance restoration, jurisdiction, the law of habitual residence, exclusion period.